전군표 국세청장 거취 촉각

“짐 벗어 버리고 싶다” … 청와대 후임 인선 물밑 작업

현직 국세청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군표 국세청장은 6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46분께 검은색 에쿠스 관용차량을 타고 부산지검 2층 현관 앞에 도착한 전 청장은 차에서 내려 잠시 숨을 고른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으나 혐의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한 목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한 후 검찰 직원에 둘러싸여 청사로 들어섰다.

한편 국세청은 전 청장의 사법처리를 앞두고 초긴장에 빠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되며 현안이 산적한 연말을 앞두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현직 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국세청 주변에서는 조만간 전 청장의 거취가 명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국세청 주변에서는 전 청장이 구속영장 청구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날 현재 전 청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6일 “전 청장이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전 청장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백하다는 입장이지만 국세청 조직에 해가 되지 않도록 6일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까지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전했으나 전 청장은 거취표명을 하지 않았다.

전 청장은 지난 5일 퇴근하면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번 사건이) 귀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면서 “지금까지 자리에 연연해서 (국세청장으로) 있은 것은 아니고 국세청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고 싶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전 청장의 거취와 함께 후임 얘기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켜 보자’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 청장이 구속될 경우에 대비해 인사 실무진을 중심으로 후임 인선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후임 국세청장 인선과 관련 청장 물망에 오른 국세청 내부인사에 대해 금융거래조회에 관한 동의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이미 후임 청장 인선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전 청장의 후임과 관련해서는 한상률 국세청 차장, 오대식 서울지방국세청장, 권춘기 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의 내부 승진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조직 쇄신을 위해 재정경제부 세제실 출신 등 외부 인사 영입설도 나오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6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윤철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정당간 대선 ‘氣 싸움장’ 변질

“홍보처 연내 감사 착수”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6일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가 빗발치는 등 대선을 앞둔 정당간 기싸움이 팽팽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의 미진함을 성토하면서 이 후보 흠집내기를 시도했고, 한나라당 역시 신당의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정윤재씨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세청, 국정홍보처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신당 김종률 의원은 “이명박 후보 재임시 여의도 금융센터를 설립하면서 미국계 보험회사인 AIG에 1조 이상의 시세차익이라는 엄청난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사건은 ‘제2의 론스타 먹튀사건’으로서, 국제금융허브도시육성 자문단 운영 및 AIG지역본부 유치 허위홍보, 서울시청 직원의 접대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채일병 의원은 “BBK주가조작 사건에서 금감원은 김경준씨를 조사하지 않고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은 채 주범이 김씨라고 결론을 냈다”며 “감사원이 조속히 금감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98년 포철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김만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해 감사원이 총대를 멘 대표적 표적감사였다”면서 “검찰이 도곡동땅 거래를 김만제씨 주도로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도 신당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검찰의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등 국정홍보처의 업무 실태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혀 연내 감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연합뉴스

“대선, 무능한 좌파정권 심판해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연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6일 “국정파탄 세력인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용, 면피용 정당으로 새로운 60년의 역사적인 시작을 뻔뻔하고 무능한 이들 좌파정권에 다시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나라의 근본,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수령”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5년은 한마디로 ‘거꾸로 간 5년’으로 대한민국은 모욕과 경멸을 당했다”면서 “‘그 놈의 헌법’으로 법질서는 무너졌고 철 지난 이념 때문에 국가 정체성이 흔들렸으며 저자세.무원칙의 대북정책은 북핵폐기에 차질을 빚고 남남분열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당 정동영 후보에 대해 “신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이고, 정 후보는 국정파탄세력의 후계자일 뿐으로 간판만 바꿔단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우리당 간판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면서 “노인 분들은 집에서 쉬시라고 한 사람이 ‘가족 행복’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언행이 도를 넘었다. ‘정치인 노무현’의 권리는 퇴임 후에 주장하고 지금은 ‘대통령 노무현’의 의무를 다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의혹과 관련, “BBK 사건의 당사자인 김경준씨의 귀국에 목숨을 건 세력이 있다. 이들은 ‘한방의 유혹’에 목을 매고 귀국하면 카 퍼레이드라도 할 것처럼 보인다”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관한 의혹도 커지는데 이번에는 ‘11월의 추억’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과감하게 지방에 넘겨야 한다. 지방은 교육·치안·행정·재정의 ‘4대 자치’가 확립돼야 말 그대로 지방화 시대가 되는 것”이라면서 “지방을 3~4개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새만금 사업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몰염치한 주장”

靑, 강재섭 대표연설 비난

청와대는 6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 정부를 국정파탄 세력으로, 참여정부 집권 5년을 ‘거꾸로 간 5년’으로 규정한 데 대해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비난하면서 맹공을 가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강 대표의 국회 연설에 대해 “전체적으로 참 편리하고 염치없는 주장”이라며 “사실을 무시해서 편리하고, 스스로의 역사적 과오도 남에게 덮어씌우는 염치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강 대표가 ‘거꾸로 간 5년’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과거 어느 정권시절에서 비롯된 것이며 10년 전 환란은 누가 만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어려움 속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왔고, 객관적인 성과는 어떠한 것인지, 분명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의도적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기억력도, 책임감도 함께 잃어버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평창의 눈물 되풀이 말아야

홍행기

사회2부 차장

“모로코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와 걱정입니다.”

지난 1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얘기를 나누던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표정이 문득 어두워졌다.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박 지사는 “강력한 경쟁 상대국인 모로코가 최근 이웃 국가인 아프리카·이슬람권 국가들을 잇따라 BIE(세계박람회기구)에 가입시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여수가 우세한) 현재의 판세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며 말을 흐렸다.

그는 이어 “현재 분석으로는 여수가 BIE회원국 과반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투표 당일까지 모로코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까지만 해도 98개국에 그쳤던 BIE회원국은 한국과 모로코, 폴란드의 유치전이 가열되면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 5일 가봉이 가입하면서 무려 111개국으로 늘었다. 물론, 박람회 유치국 결정투표를 앞두고 회원국이 늘어나는 것은 ‘국가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관행적인 일’로,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묵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가입한 국가 중 상당수가 모로코에 우호적인 국가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말부터 지금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부티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니제르공화국, 코모로 공화국, 과테말라, 가봉 등은 모두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어 모로코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BIE 회원국의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BIE 총회가 열리는 오는 11월 27일 이전에 가입 신청만 하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지는데다 모두가 똑같이 1표씩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국가에 우호적인 국가의 가입이 증가하는 것은, 결국 투표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최종 투표일을 20일 남겨두고 전남도는 물론 여수시와 중앙유치위원회가 잇따라 ‘모로코 경계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박 지사는 물론 “또 다른 경쟁 상대국인 폴란드도 우방을 상대로 회원국 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우리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좌절을 경험했고 또 강원도 평창의 실패를 지켜본 전남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제 투표일까지는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2006년 5월 22일 BIE에 여수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여수시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달려온 1년 6개월여의 힘든 여정이 값진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

/redplane@kwangju.co.kr